

활력이 있고
쾌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 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28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8月 25日(火曜日) (1)

99년도 어항건설예산 정부안 1,499억 6,900만원 규모 전년비 3.6% 증가 미완공 어항 조기완성 여건변화에 능동대처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이 1천4백99억6천9백만원 규모에서 정부안으로 조정, 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조정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금년대비 3.6%인 52억1천만원이 증액

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4.3%가 늘어난 1천3백39억6천9백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일반회

계 요구액이 모두 삭감, 농 특회계의 1백60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 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 및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99년도 어항건설예산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8예산(A)	99 예산(안)		증 감		비 고
		요 구	조 정(B)	(B-A)	%	
합 계	144,759	182,300	149,969	5,210	3.6	
일 반 회 계	57,440	79,827	63,000	5,560	9.7	
<제1·3종어항>	57,440	71,800	63,000	5,560	9.7	98년 2차 추경예산 200억원 제외
○시설비	56,499	65,708	57,642	1,143	2.0	
- 계속투자	28,293	32,700				
- 보수보강	28,206	33,008				
○부대경비	941	6,092	5,358	4,417	469.4	
- 연구개발비	135	590	150			
- 기본설계비	450	4,700	4,500			
- 실시설계비	-	566	500			
- 시설부대비	356	236	208			
<제2종어항>	-	8,000	-	-	-	
- 보강	-	8,000	-	-	-	
농 특 회 계	87,319	102,500	86,969	△350	△0.4	
<제1·3종어항>	70,969	83,000	70,969	-	-	
○시설비	70,151	79,855	70,289			
○부대경비	818	3,145	680			
- 감리비	629	2,930	490			
- 시설부대비	189	215	190			
<제2종어항>	16,350	19,500	16,000	△350	△2.1	
제1·3종어항 시설비 합계	128,409	154,800	133,969	5,560	4.3	

올해 어항공사 순조

현지점검 시공평가 등 건설시공에 만전

올해 어항시공사는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 7월 31일 현재 전체공사진도가 예정공정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 59개항 63건 공사중 지난 31일 현재 분기별 발주계획에 따라 전체사업의 97.5%인 57건이 착공, 대부분 예정공정을 상회 53.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풍진로권 및 공사 규모가 큰 항의 조기발주와 완성단면 위주의 구조물시공 및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 마무리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항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견실시공과 관련, 연초부터 현지점검 및 시공평가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어항공사의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7월 31일 현재 공사진도가 50% 이상인 항은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울도항 8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풍남항 62.5%, 초도항 75.5%, 남도항 50.0%, 시산항 79.0%, 돌산항(준설) 57.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매물도항 56.8%, 외포항 77.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안목항 78.4%, 수산항 5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어청도항 89.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소흑산항 84.4%, 수품항 78.8%, 보옥항 64.4%, 청산도항 65.7%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현포항 72.6%, 죽변항 62.4%, 감포항 92.1%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신양항 8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모항항 79.4%

원을 확보, 가급적 전국에 걸쳐 균형있게 투자하고 원칙적으로 이월없이 연내 준공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계속투자항의 조기완공 촉진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항 등 구체적인 투자항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어항건설예산 추경서 200억원 추가확보

고용증대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98년 제2차추경정예산편성에서 어항건설부분에 2백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제2차추경정예산편성에서 제1·3종 어항건설에 총액예산 2백억

지난 8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창했다. '제2의 건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아닌 '아시아적 가치'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제2의 개혁'과 의미가 상통한다는 토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나온 우리의 역사는 뿌렸한 비전이 없이 눈앞의 과제를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 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때워나간 부끄러운 역사였다.

바로 그것이 누적된 끝에 총체적으로 파국을 맞게 된 것이 다른아닌 IMF사태이다.

이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제2의 건국이란 새출발의 대열에 서서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을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제2의 건국이 과거 역대 정권이 주창한 내용과 크게 달라져야할 기본적인 인식은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국민운동은 구심점과 구심력을 잃기 쉽다. 어항분야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어항건설 역사에서 그의 미를 단단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다.

2차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역시 제2의 건국이란 각오로 전후복구에 매진했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그들은 전후 절박한 기아선상에서 항구적인 식량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항건설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총

력을 경주한 결과 불과 50년만에 세계 수산업 제패라는 결실을 맺게되었다.

1년, 2년이 아닌 50년, 1백년의 비전이 오늘날 일본 수산업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 기왕에 제2의 건국이 선언된 이상 우리 어항업계 역시 백년대계의 비전아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

나간다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역시 어항부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이고도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늘상 주장해 온 것이지만 어항은 사회간접자본이며, 어항개발은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토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0년, 1백년 뒤를 생각해 보지는 것이다.

관광·레저·휴양·교육·만남의 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어항, 국민적 어항으로 개발의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의 후대에 틀림없이 값지고 소중한 과실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는다.

이를 위한 우리 어항인의 자세 역시 차제에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라고 하면 부실, 부패, 부조리 등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이와 같은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 어항산업이 일순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제2의 건국'이 '제2의 개혁'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안이한 자세로는 물밑듯이 밀려올 선진제국의 기술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공사는 백년대계를 염두해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견실시공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새로운 어항역사의 한 주역으로 탄생하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의무임을 차제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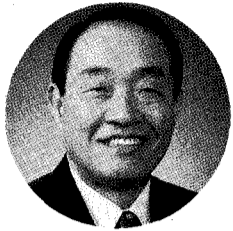
김 대통령의 '제2의 건국' 철학을 어항인 모두가 깊이 되새겨 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지금이다.

제2의 건국과 어항건설 백년대계

동

정

해양수산부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37명에게 표창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7일 해양수산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수산물시식회에 참석, 8일에는 해양수산부 출범 2주년 기념식을 주재하고 유공자로 선정된 본부 10명, 소속기관 20명, 해경 7명 등 37명에게 표창, 11일에는 지난 88년 11월에 경남 통영군 두미도 근해에서 조업중 폭풍우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최하아련 군에게 격려금 5백만원을 전달.



孫井植 한국어협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협회장은 8월12일 수협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공청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8월10일 부산공동어시장 회장 취임식에 참석, 14일에는 농협창립 3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이어 국립극장 입구에서 열린 3·1운동 기념탑 건립기념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8월7일 해양수산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수산물시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1일 전남지역공동모금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4일에는 한국4H회원 문화탐방활동 개원식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 98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 13일에는 청소년선도 20년사 출판기념식에 참석, 15일에는 8·15광복절기념 제27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를 개최.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8월6일 송원학원 강당에서 제3회 송원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중 고 학생 2백2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13일에는 청소년선도 20년사 출판기념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8월7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수산물시식회에 참석, 1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취임식에 참석,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기념행사에 참석, 21일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8일 신안군 증도 공사현장에 출장.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11일 광주시민회에서 98통일정세보고회를 개최.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21일 하정화술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1일 북제주군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8일에는 세계섬문화 축제에 참석, 15일에는 광복절기념 행사에 참석, 11일에는 범죄예방보호관찰분과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의 장녀 회군양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상록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박희도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는 지난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영동선영.

회사 회장은 8월21일 하정화술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의 장녀 회군양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상록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박희도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는 지난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영동선영.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의 장녀 회군양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상록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박희도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는 지난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영동선영.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의 장녀 회군양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상록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박희도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는 지난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영동선영.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의 장녀 회군양이 지난 21일 오후 1시 상록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박희도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는 지난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영동선영.

“SOC확충에 예산 집중투입을”

기획예산위 설문조사결과 고용효과 커

국민들은 대체로 내년도 예산이 산업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초점을 맞춰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99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내년도 경제여건의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산업구조조정(26%), 실업대책(25%), 사회간접자본(23%)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33%가 실

업문제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과 관련 고용효과가 큰 공공토목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건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감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응답(45%)이 많았으며 SOC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적자재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8%를 차지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재원의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0%가 공기업의 매각을 꼽았으며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되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하는 방향으로 세정이 집행돼야 한다(6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는 기획예산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7월 두달간 인터넷과 하이텔의 나라살림대화방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부산해양종합공원 4천800여억 규모

‘마린토피아’ 외자유치로 건설

부산해양종합공원 ‘마린토피아’(Marintopia) 조성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F 한파로 인한 기업의 자금여력 부족으로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참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외자를 유치해 건설하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해양종합공원건설산업은 올 상반기중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민자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이 저조해 사업시행방식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시가 수탁·시행중인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성분석을 재실시, 수익성 보전대책을 수립키로 했으며 외자유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민자유치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체와 공동투자가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국내 경제여건상 민간의 즉각적인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시행시점을 국내 경기가 호전되는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민간의 사업제안을 통해 활용용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준설토투기장 13만9천평에 들어설 부산해양종합공원은 총 4천8백26억원의 민자를 투입,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각종 전시시설과 테마파크, 관광호텔, 놀이동산 등을 오는 2006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하반기중 시설계획에 대한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 다.

에스컬레이션 산정기준 계약체결일서 입찰일로

재정부 계약제도 개선

정부공사에 대한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정기준이 입찰일로 조정된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시마다 이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에 근거없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상에 규정돼 있는 하도급저가심사제가 삭제돼 앞으로 하도급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여 관장하도록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중 회계예규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관련부처와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공사의 에스컬레이션 산정기준이 계약체결일로 돼 있으나 이를 입찰일로 앞당겨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 공사가 모두 완료돼야 전액 반환해줬으나 앞으로는 차수별 계약완료시 당해 차수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민간항만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유지보수도 자율에 맡겨

해양수산부는 민간 항만공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간 항만공사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민간항만공사의 집행절차를 시행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항만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기로 했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한 민간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항만공사의 경우 해당 지방청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PQ대상 설계 감리비 상향조정 하도급 범위 내용제한도 완화

내년부터 PQ대상 설계 감리용역비가 상향조정되고 설계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축설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용역부분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소기업 감리업자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PQ대상 설계 감리용역비를 상향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5~7개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과다한 관계로 발주기관이 사전에 입찰참가자수를 제한토록 한 규

정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영세한 설계용역자에게 용역수행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계용역의 하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내용의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바

꾸 건축법에 의해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축설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발주기관이 책임지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해상관광호텔 설치를 허용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 및 바다오염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지해온 해상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상관광호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수면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현재 제정 추진중인 연안관리법에 해상관광호텔

설치근거를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오는 2000년에는 해양건축법을 별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관광호텔은 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박을 해상에 고정 또는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북부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상관광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잠재력 높은 항포구 개발을 촉진

어항지정기준 개정 항간거리 어획량삭제 등 합리적 조정

해양수산부는 8월18일 어항의 지정기준중 어항지정기준에관한세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선수 및 총톤수에 관한 기준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 항간거리·어획량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어항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항법시행

규칙과 어항지정기준에관한세부규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어항지정기준을 통합하고,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은 항·포구 및 다기능어항의 개발과 민자유치를 통한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항지정기준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개정 어항지정기준에서 해상교통·관광 또는 유통 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생활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항·포구, 대체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항·포구 등을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4개 지구 1만9천ha에 간척농지를 개발키로 했으며, 전국 3개항에 6개 선석의 연안선 전용부두를 건설, 연안해운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여천 돌산 통영 사량 등 전국 32개 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1천5백94억원을 투자해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해양공간조성을 위해서는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 4개 지역에 해양수산과학관을 건설하는 한편 부산시에 종합해양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안해역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1백24개소에 연안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키로 했으며 강원도 고성을 비롯, 전국 4개소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또 연안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남·동해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연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인공섬 등 해양공간개발 수요에 대비 해양구조물 핵심기술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인공섬 첨단해양도시 등 해양공간개발에 대비, 해양구조물 핵심기반기술을 오는 2002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공간의 종합적 개발에 앞서 해상구조물 건설을 위한 핵심설계기술을 확보키로 하고 오는 2002년까지 심해저 광물채굴기술, 부유식 해상구조물 설계기법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까지 기반기본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최종 연구계획을 확정짓기로 했으며 기초연구개발비 3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해상구조물 시공분야의 경우 국내 기술력이 일정수준에 있다고 판단, 투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설계분야에 연구력을 집중시키되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해양개발프로젝트의 연계, 개발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구상중인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1단계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광물채굴기술과 부유구조물 설계기술을 오는 2002년까지 개발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시설투자에 앞서 광물자원의 개발권을 미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공간이용을 위한 기반기술개발과 병행, 민간연구기관의 해상구조물 응용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 오는 2010년 전남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해양엑스포시설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반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수도권 또는 남해안 청정해역에 인공섬을 건설, 21세기 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도시건설이 활성화되면 산업업지산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을 위해 인천 부산 동해 등 9개 지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

키로 했으며, 해양안전기능의 확충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정비도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어항지정 기준(어항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종전	개정
제1종어항	○ 10km이내 1·3종어항이 없고, 5km이내 2종어항이 없는 곳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훈령) - 어선의 수가 60척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이상이며 -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이상 연간 어획량이 500톤 이상인 곳	○ 지역선적 어선의 수가 6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이상 ○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이상 이용예상 항·포구
제2종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 (훈령) - 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인 곳	○ 지역선적 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인 항·포구
제3종어항	○ 10km이내 1·3종어항이 없는 곳 ○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훈령) - 연간 1,000척 이상의 외래어선이 이용하는 곳	○ 근거지로 이용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이고 대피하는 어선의 수가 20척이상 예상 항·포구
특례기준	○ 1·3종어항의 경우 지역의 균형개발, 어민소득증대 및 민간자본으로 어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곳 ○ 1·2종어항의 경우 전국적으로 조화된 어항의 균형개발이 필요한 곳 (훈령) - 1종어항 · 국가 주요사업 시행으로 대체어항이 필요한 곳 · 수산자원의 연구 또는 보호관리를 위한 곳 · 어항을 중심으로 어장·어촌·해양관광등을 연계한 어촌조성이 필요한 곳 - 3종어항 · 면단위 행정구역내 3종어항이 없는 곳	○ 관리청은 상시 20척 이상의 어선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 해상교통, 관광 또는 유통중심지등 중요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생활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항·포구 ○ 대체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항·포구

해양개발에 3.4조원 투자

32개 권역 어촌종합개발 추진

정부는 해양환경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올해 총 3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공간 개발사업 등 총 1백17개 단위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

처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98해양개발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6년 1월에 확정된 해양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양개발기본법에 의해 매년 수립되며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양공간 이용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7천3백85억원을 포함, 총 2조2천3백56억원을 들여 영산강 지역 등

해양수산부는 어업전진기 지향으로 개발예정인 삼천포항에 소형어선부두를 증설하

는 대신 여객부두기능을 축소하고 해경부두 이전으로 선박접안공간이 늘어나는 목호항은 기존항만시설을 전면 개량, 현대화 하기로 했다.

또 배후산업단지조성 등으로 항만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대산항의 기능을 지역산업실정에 맞게 재조정키로 하고 일반화물중심으로 계획된

대산항 시설계획에 원유처리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삼천포항 목호항 대산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향후 물동량 수요변화를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된 시설계획으로는 지역의 산업수요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으로 항만별 기본시설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3개 항만의 최종시설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여객부두 어선부두 등 복합항만으로 개발예정인 삼천포항은 물양장 규모를 총연장 5백40m에서 5백57m로 늘리는 대신, 신항 5천톤급 1선석에 대한 개발시기를 2002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며 구항 물양장은 이용률 감소에 대비해 시설규모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국내 技術用役業體의 선두주자 —

都和가

엔지니어링 尖端技術時代를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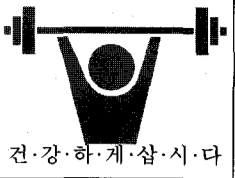
營業分野

- 港灣 및 海岸
- 上下水道
- 水資源開發
- 鐵道 및 地下鐵
- 都市計劃 및 團地設計
- 造景
- 環境
- 交通設計
- 道路 및 橋梁

(株)都和綜合技術公社

DOHWA ASSOCIATED ENGINEERING SERVICES,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0-6 도화빌딩 TEL : 541-2201~10, FAX : 545-6050



수면 무호흡증

수면장애의 일종, 딱딱한 바닥에서 낮은 베개가 좋아

중년에 접어들면서 잠을 자는 도중 갑자기 호흡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설치는 예가 많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면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현상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날 때를 말한다.

이 병은 고혈압, 우울증, 성기능 장애, 기억력 감퇴 등을 가져오고 심하면 도중 질식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

잠자는 도중 숨을 쉬지 못해 신체 내에 산소가 모자르면 혈액이 정상 이상으로 빨리 순환, 심장부담과 고혈압을 일으키고 그 외에 산소결핍이 나타나 뇌기능을 떨어뜨린다. 실제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이 병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호흡 상태에서 산소가 모자르면 잠자는 도중 이를 스스로 느끼고 깨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감지하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서는 상쾌함 대신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이 병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난다. 숨쉬는 통로가 막혀 호흡이 곤란한 폐쇄성과 아예 호흡능력이 없는 중추성으로 구분한다.

폐쇄성은 코, 비인강, 입 등 상기도의 이상으로 목젓이 쳐져 있거나 연구개가 내려 앉았거나 축농증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중추성은 기도의 이상이 없어도 숨을 쉬려는 노력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아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폐쇄성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중추성은 호흡을 관장하는 신경계통의 질환이므로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소관이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폐쇄성은 심한 코골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추성은 코골이를 동반하지 않거나 약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 폐쇄성은 항상 수면이 부족한 수면과다증을 유발하지만 중추성은 잠자는 것이 두려워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은 폐쇄성의 경우 기도를 자극하는 약물이나 기도를 확장해주는 수술을 이용한다. 또 잠 잘 때 호흡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중추성은 수술을 해도 소용없으며 호흡촉진제, 호흡마스크, 호르몬요법 등을 이용한다.

또, 잠을 잘 때 딱딱한 바닥에서 낮은 베개를 베고, 자기 전에 과식·술·흡연·카페인을 피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며, 잠 잘 때 입을 다물고 자는 등의 일반적 방법을 실시하면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은 막을 수 있다.

한편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면 기도를 넓혀 주어 무호흡을 일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2)

第2章 浚渫工

C. 쇄암봉의 관입깊이와 쇄암깊이
쇄암봉의 관입깊이는 쇄암피치와 함께 쇄암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관입깊이가 0.7m~2.0m에 있어서 완전쇄암이 되는 깊이는 쇄암봉 관입깊이의 1/2 정도이다. 그래서 통상은 관입깊이 1.0m에서 시험적으로 쇄암 및 준설을 시공하고, 굴적을 음향측심기 또는 다이버에 의하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설정한다.

② 층계식 쇄암
그래브식 준설선의 그래브버킷을 떼고, 그 대신 공기구동식의 록해머를 매달아 해머가 물 밑에서 좌우로 회전하지 않도록 직립시키고, 해머의 자중을 모일포인트에 집중하여 해머의 타격력에 의하여 쇄암하는 공법이다.

특징은 중추식에 비하여 진동이나 소음이 작고, 파쇄한 암석의 비산범위도 작으므로 협소한 장소의 균열이 발달한 혈암, 사암이나 풍화한 화강암 등에 적합하다. 그러나 쇄암능력이 작으므로 균열이 없는 암반에 대하여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한다. 록해머에 의한 최근의 시공에는 드물다.

(8) 준 설

그래브식 준설선은 준설깊이나 토질에 대한 적응성은 뛰어나나 해저 및 비탈면의 마무리 정밀도가 약간 낮다.

그래브선에 의한 준설은 그림 2.3.6 및 그림 2.3.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앵커를 박고, 그 앵커와이어를 조작하여 좌우 및 전진하면서 준설한다.

1회에 앵커를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선박의 크기나 앵커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전진방향으로 30~50m 횡방향인 선폭의 3배정도가 보통이다(소규모의 어항에서는 특히 앵커 박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선박과의 조정이 중요하고, 이것이 작업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다).

토운선은 그래브선에 횡접근하여 적재작업을 하는데 과적하여 토운선 상에서 여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한쪽으로 짐이 쏠릴 경우 예항시

에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준설구역·깊이의 확인과 오염의 감시는 시공도중에 항상 실시한다. 위험물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전에 위험물 탐사와 제거를 한다. 준설 두께가 2.0m를 초과할 경우는 2.0m를 넘는 층두께의 탐사를 본공사와 동시에 하는 수도 있다.

일련의 준설·운반작업의 종료후, 준설구역의 불균형, 파다 남은 곳은 없는지 측량을 한다. 구역의 불균형, 파다 남은 곳이 있을 경우는 재차 준설을 하고 측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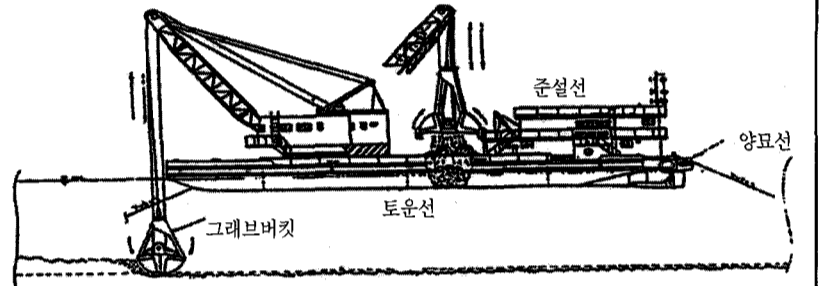


그림 2.3.6 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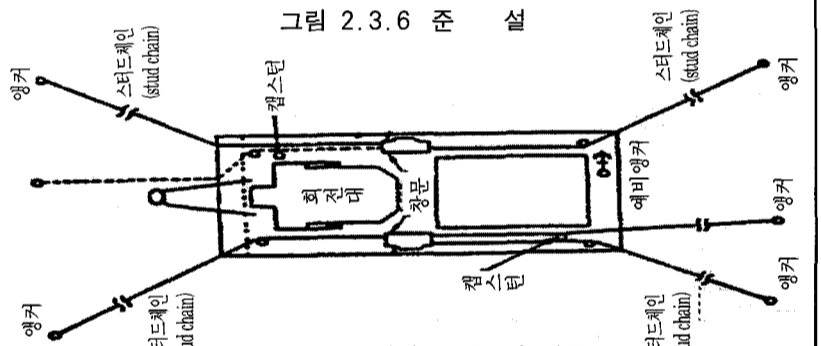


그림 2.3.7 앵커의 배치와 이동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합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출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인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

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집행관예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를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

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 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배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5.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 (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

청한다.
○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 추심명령 또는 전심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6.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 입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 배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보와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할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
과
생
활

법
과
생
활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